



7/22 수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결 정

위 등본입니다.

2011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최준배

사 건 2011카합1092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신 청 인 김미희

부산 해운대구 우동 7603 오션타워 1104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김준모, 윤정노

피 신 청 인

1. 구옥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1 롯데캐슬 201동 504호

2. 강춘자

하남시 신장동 528 현대백조아파트 101동 1505호

3. 이기화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명비발디파크 이기화골프아카데미

4. 송이라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69 금호아파트 107동 13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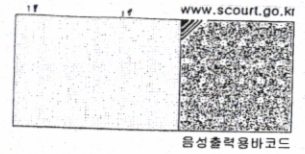
피신청인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조남대, 박창주

5. 한소영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태영데시앙 정자뜰마을 102동 1702





호

##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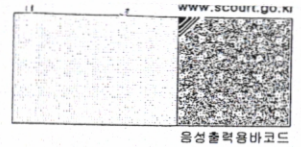
1. 신청인과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이의 2011. 4. 7.자 임시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위 사단법인에서의, 피신청인 구옥희의 회장으로서의, 피신청인 강춘자의 수석부회장으로서의, 피신청인 이기화의 부회장으로서의, 피신청인 송이라의 전무이사로서의, 피신청인 한소영의 이사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가. 피신청인 구옥희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김대식(1956. 4. 12.생, 서초구 서초동 1706-3 법조빌딩 501호)을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나.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3,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부담한다.
3. 제1 내지 2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로 3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이 사건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 청 취 지

담보제공조건을 제외한 주문 제1항 및

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한명현을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회장 직무대행





자로 선임한다.

## 이 유

### 1. 사안의 개요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한국 여자 프로 골프선수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회원 수는 총 1,445명이 고, 회원 중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는 총 56명이다.

(2) 신청인은 2006. 3. 29.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29.부터 전무이사 지위에 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4. 7.자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신청인들은 위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다.

#### 나. 2011. 4. 7.자 임시총회의 개최

(1) 이 사건 협회의 선종구 전 회장이 2011. 3. 22. 그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후, 2011. 3. 24. 긴급이사회가 개최되어 당시 수석부회장인 한명현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삼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협회의 2011. 3. 25.자 정기총회에서 한명현과 부회장인 피신청인 구옥희, 강춘자 3인이 동반사퇴하였고, 당일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구옥희를 회장으로, 피신청인 강춘자를 수석부회장으로 각 선임하였다. 그러나 위 선임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11. 3. 29. 피신청인 구옥희, 강춘자는 위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2) 한편, 신청인은 전 회장 및 부회장들이 모두 동반사퇴함에 따라, 이 사건 협회 정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3) 피신청인들 측 대의원들 중 일부는 2011. 4. 7.에 임원해임 및 신규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1. 3. 31.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협회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보하였으며, 2011. 4. 1. 이 사건 협회 사무국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협회 정관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① 회장 선출 - 외부회장 영입 또는 내부회장, ② 임원 해임의 건, ③ 임원 선출의 건이 각 안건"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2011. 4.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스카이홀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을 위임한 15명을 포함하여 51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협회 사무국장인 김일곤이 사회를 보면서 김소영 이사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통지된 각 안건에 대하여 총회를 진행한 결과, ① 28:20으로 협회 내부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안이 채택되었고, ② 전무이사인 신청인은 총회소집을 해태했다는 이유로, 사외이사 박영웅, 이강성, 정병수, 이용우, 강정원은 이사회 불참 등을 이유로 각 해임되었으며, ③ 피신청인 구옥희가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표결 결과 피신청인 구옥희가 39표, 한명현이 10표 획득), 피신청인 강춘자는 수석부회장으로, 피신청인 이기화는 부회장으로, 피신청인 송이라는 전무이사로, 피신청인 한소영과 구영희, 이영귀는 각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 다. 정관 규정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





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전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 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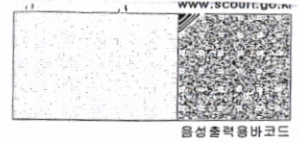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하였으며, 해임되는 임원 별로 표결을 실시하지도 아니하는 등 그 소집 및 진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임원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잔여 임기를 수행할 임원을 이사회에서 보선해야 함에도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 그 결의 내용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및 회장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한다.

#### 나.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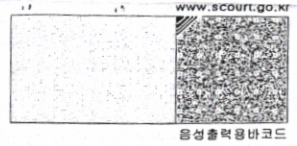
피신청인들 중 구옥희, 강춘자, 이기화, 송이라는, 신청인은 대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회의 임원 지위를 다투기 위하여 반드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위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집권한 유무

위에서 본 정관 제24조 제1, 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협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대의원들이 총회 소집권한을 가지려면,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재적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이르러야 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경위를 살





퍼 보건대, 피신청인들 측인 김소영, 이지선, 권선아는 2011. 3. 30. 신청인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피신청인들 측은 대의원 33인 명의의 소집요구 동의서를 수거하여, 다음 날인 2011. 3. 31. 이 사건 협회에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직접 소집·개최하였다.

경위가 이와 같다면, 2011. 3. 30.에 있었던 소집요구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인 소집요구라고 볼 수 없고, 2011. 3. 31.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대의원 33인 명의의 소집요구동의서가 팩스로 송부되었다고는 하나 33부가 모두 송부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송부된 동의서가 신청인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에게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대의원들'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기피'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신청인들은 2011. 3. 31. 이 사건 협회 회의실에서 권선아가 소집요구동의서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제시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총회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유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신은영 이사가 답변하면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신청인의 해임권이 지금 연관되어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내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 두 분께 맡겼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가사 위 소집요구동의서가 신청인에게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동의서가 제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3. 31.에 피신청인들 측은 곧바로 총회 소집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소집권자인 신청인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달리 신청인이 적법한 총회소집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대의원들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하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여지가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협회 임원으로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후임 회장 등 임원 선출을 통해 조속하게 이 사건 협회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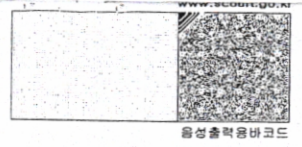
다만 신청인은, 이 사건 협회의 전 수석부회장이자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되었던 한명현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 사건 협회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한명현이 공정하게 후임 회장 선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대행자는 제3자인 변호사 김대식을 선임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3.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이종문

판사 이혜민

